

1998년 노동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조성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한국경제와 노동자의 처지가 절박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형 고도성장과 관치금융으로 특징지어져온 한국경제는 내외적으로 급격한 구조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서 대량실업과 실질임금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노동계는 냉철한 판단으로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의 근본 체질을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변화나 새정부 정책의 방향성, 외환위기와 IMF의 간섭 정도 그리고 각 경제주체의 위기대응 방안이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에 98년의 노동경제 전망을 내놓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염두에 두면서도 다소 과감한 예상을 제시함으로써 더 큰 논의에 하나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일반경제

돌이켜보면 97년말의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한국경제의 전반적 위기 징후는 나타나고 있었다. 95년말부터 시작된 경기후퇴로 인하여 재벌중심의 성장이 가져다 준 후유증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발빠르게 대응했던 두산이나 선경 그룹의 경우는 스스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례로 꼽힌다. 물론 그것

은 명예퇴직 등에 주로 의존한 '노동자 희생행' 리스트릭처링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에 다가선 것은 아니었다. 여하튼 위기 인식과 구조조정에 둔감했던 재벌들은 96년 말부터 잇달아 부도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한보, 기아, 한신공영, 우성, 유원, 쌍방울, 해태, 뉴코아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업들이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재벌들의 연쇄부도 사태는 한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정정유착의 폐해가 깊어

터진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연쇄부도사태와 경기하강국면이 겹치면서 97년 1, 2, 3사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각각 5.5, 6.4, 6.3%를 기록(잠정)하여 95년의 8.9%와 96년의 7.1%를 밑돌았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경영위기 주장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성장률로서 이는 주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경공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장세가 확대되었으며 서비스업은 통신업(26.9%)의 성장에 힘입어 7~8%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총수요 구성별로는 민간소비가 5% 미만의 성장에 그쳤으며, 고정투자는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기업의 투자억제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3사분기 -4.7%)을 지속했다. 전기 전자,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늘어난 데 비해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재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고 3사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한편 내수부진과 임금인상 억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물가는 1, 2, 3 각 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7, 4.0, 4.0% 상승을 보여 안정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만으로 본다면 97년의 경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97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책 당국과 재벌, 금융기

관들의 인이함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재벌의 무분별한 차입경영 관행과 관치금융 체제의 낙후된 금융산업 구조로 인하여 대기업들의 연쇄부도 사태는 부실채권 규모를 30조원 넘게 증가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급속히 초래하였다. 여기에 기아사태를 조속히 매듭짓지 못하고 문제의 핵심이 아닌 최고경영자의 퇴진과 노조 무력화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증자사와 일부 은행들의 신인도가 국내외에서 크게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증자사 등의 해외신인도 하락은 단기 자금을 빌려다가 장기로 대부해 주던 구조하에서 연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우리나라 금융권 전체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외환위기를 불러오게 된 것이었다. 일단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금융기관이 부실하다는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는 상황은 이미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4/4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는 산산히 부서졌고 불황기와 구조조정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고통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위기의 해결사로 나선 IMF는 기구의 기본 목적 자체가 외환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여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경장수지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성장률의 하향조정과 긴축재정, 자본시장 개방, 금융산업 구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라토리엄(국가 지불유예)이 선언되면 국내 경제는 대외 거래가 거의 마비되고, 그럴 경우 경제수준은 수십년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

문제는 이러한 실업과 불안정취업이 이런 경제위기 이전에도 공식통계계 잡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악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소위 IMF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본과 국가가 위기탈출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희생을 더 크게 요구하게 된다면 고용문제는 구조적으로 크게 왜곡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에 모라토리움을 피하기 위한 IMF 요구 수용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런 상황을 이용한 미국과 일본 자본의 요구 사항이 삽입되는 피해조차도 감수해야 할 지경이 되었다. 물론 세계 경제규모 13위인 한국의 모라토리움은 일본 경제의 위기와 세계공황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선진 금융권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IMF와 미국이기 때문에 굴욕적인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와 IMF 협상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선 정부의 경제성장을 목표치인 2.5%를 지키기도 매우 벅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산업의 재편과 재벌경제체제의 수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유망한 기업이 흑자도산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외환, 금융위기가 얼마나 빨리 수습될 수 있는가와 구조개혁의 정도와 방향성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환율인상으로 수출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우리와 주요 품목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의 환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수입감소는 두드러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물가는 환율상승에 따른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품 가격 급등으로 98년 상반기에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중반 이후에는 내수위축과 경쟁격화로 일부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상으로는 6% 이상의 소비자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과 구조개혁 작업으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IMF의 요구에 따라 건축재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총수요 확대에 의한 경기전직과 고용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러한 저성장, 고실업, 고물가 상황은 99년에도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환율과 금리가 치솟고 주식과 채권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자본시장 개방 및 외국인 M&A 허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30년 이상 쌓아온 우리의 국부(國富)가 국외에 헐값으로 팔려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국제 투기자본(hot money)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면 향후에는 국제경제의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한국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고용

커다란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한 고용안정문제는 크게 실업문제와 불안정취업의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실업은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의 원천이 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숙련 등 노동력 자체가 피폐화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사회복지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임금과 기업복지에 의존해왔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고용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임시직, 계약직, 파견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들 또한 적정한 수입을 올릴 수 없고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업에 준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처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실업과 불안정취업이 이런 경제위기 이전에도 공식통계에 잡히는 것이

상으로 훨씬 악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소위 IMF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본과 국가가 위기탈출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희생을 더 크게 요구하게 된다면 고용문제는 구조적으로 크게 왜곡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문제의 구조적 왜곡은 결국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승자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선 97년의 고용동향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97년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4분기에는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상반기와는 달리 3/4분기 들어서는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2.4%로 둔화되고 전분기(2/4분기) 대비 증가율은 95, 96년과는 달리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가구주의 실업 혹은 임금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전업주부의 노동시장 진입이 대거 이루어졌으나(부가노동자효과) 직렬한 일자리

〈표 1〉 고용관련 주요 지표의 동향과 전망

단위: 천명, %

| | 1995 | 1996 | 1997 | | | | 1998 |
|--------|--------|--------|--------|--------|--------|--------|--------|
| | | | 1/4 | 2/4 | 3/4 | 전체 | |
| 경제활동인구 | 20,797 | 21,188 | 21,112 | 21,868 | 21,806 | 21,606 | 21,983 |
| 참가율 | 62.0 | 62.0 | 61.1 | 63.1 | 62.6 | 62.2 | 62.3 |
| 취업자 | 20,377 | 20,764 | 20,446 | 21,319 | 21,336 | 21,044 | 20,735 |
| 실업자 | 419 | 425 | 646 | 550 | 470 | 562 | 1,253 |
| 실업률 | 2.0 | 2.0 | 3.1 | 2.5 | 2.2 | 2.6 | 5.7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KI노동통계』, 1997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노동동향분석』, 각호

주: 97년 전체는 추정치, 98년은 전망치, 96년 3/4분기의 근거는 GDP 성장률 0%일 경우임

를 찾지못하여 노동시장에서 다시 퇴출한 인구(실망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97년의 취업자 증가율은 남자의 경우 1% 미만에 머물렀으며, 여자의 경우는 96년 4/4분기 이래 3~5%의 높은 증가율이 지속되었으나 3/4분기에는 전년동기비 1.8% 증가에 머물러 95, 96년의 증가율을 밑돌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추세가 96년에 이어 계속되었고 감소폭도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4.5%와 5.3%로 확대되었다. 반면 사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에서의 여성 취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이상의 취업자 증가율이 2/4분기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선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 불안정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업 단축이나 폐업으로 인한 일시휴직자도 각

분기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경기침체의 영향이 노동자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관심인 실업자수는 1, 2, 3 각 분기 65만, 55만, 47만명으로서 분기별로 20~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96년 평균 2.0%보다 높은 2.2~3.1%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에 따라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55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자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취업자 증가율 둔화, 실업자 증가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구인배율(구인수/구직자수)이 상반기중 1.4 미만에 머물렀으며, 3/4분기에는 1이하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빚어냈다. 또한 노동이동 상황을 나타내는 이직률과 이직률도 크게 하락하여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이 이직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96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의

(표 2) 주당 평균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동향 및 전망

단위: 천명, %

| | 1995 | 1996 | 1997 | | | | 1998 |
|------------|--------|--------|--------|--------|--------|--------|--------|
| | | | 1/4 | 2/4 | 3/4 | 전체 | |
| 36시간 이상 | 18,953 | 19,317 | 18,482 | 19,795 | 19,443 | 19,171 | 18,382 |
| 36시간 미만(A) | 1,283 | 1,297 | 1,738 | 1,404 | 1,638 | 1,873 | 2,507 |
| 일시휴직자(B) | 141 | 150 | 245 | 120 | 256 | | |
| (A+B)의 비율 | 7.0 | 7.0 | 9.7 | 7.1 | 8.9 | 8.9 | 12.0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노동통계분석」, 각호
주: 97년 전체는 추정치, 98년은 전망치

영향으로 '97년에도 고용사정은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외환 금융위기로 인하여 4/4분기에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98년 이후는 악화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98년의 경제성장이 멈춘다면(GDP 성장률 0%) 고용창출 효과는 크게 떨어져 새로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 40만명이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는 특히 청년층,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존 실업자만 해도 약 6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 합해도 실업자수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자본의 사업구조조정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만일 재벌경제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단행된다면 재벌 내 한계기업의 도산, 혹은 인수 합병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산업(고용규모 30만명)의 구조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만명의 사무직 노동자들이 거

리로 내쫓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에 대한 수입선다변화 조치가 해제되는 등 상품시장의 개방폭도 확대됨에 따라 한계기업의 도산이 이어져 여기에서도 대량실업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 경우 문제는 자본이 어느 정도 정리해고를 활용할 것인가와 노동계가 얼마만큼 고용안정을 확보해 내는가이다. 즉 노·사·정 합의에 따라 임금상 동결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가 얼마나 확산될 것인가가 실업자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계의 대응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정리해고 수용 발언과 국내외 자본의 요구를 감안할 때 자본의 사업구조조정 효과에 의해 최소 20만명 이상의 실업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외환 금융위기의 수습이 늦어져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한다면 최악의 경우 전체 실업자수는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들은 부족 인력에 대하여 정규

〈표 3〉 임금관련 주요 지표의 동향과 전망

단위: 천원, %

| | 1995 | 1996 | 1997 | | | | 1998 |
|----------|-------|-------|-------|-------|-------|-------|-------|
| | | | 1/4 | 2/4 | 3/4 | 전체 | |
| 임금총액 | 1,222 | 1,368 | 1,430 | 1,401 | 1,543 | 1,477 | 1,507 |
| 명목임금증감률 | 11.2 | 11.9 | 11.6 | 9.7 | 6.8 | 8.0 | 2.0 |
| 소비자물가증감률 | 4.5 | 5.0 | 4.7 | 4.0 | 4.0 | 4.5 | 6.0 |
| 실질임금증감률 | 6.4 | 6.6 | 6.6 | 5.5 | 2.7 | 3.5 | -4.0 |

자료: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외 기타

1,300만명의 일노동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실업 또는 불안정취업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인적자본 축적이나 숙련형성, 생산성향상이 과연 가능하거나 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고용구조와 고용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적 고용보다 임시직이나 파견노동자, 파트타임 채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안정취업자의 비중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97년 이전에도 크게 확산되던 추세로서 경제난을 계기로 이 같은 불안정취업 형태가 일반화되고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 평균 36시간 미만 노동자의 비중은 97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98년에 이 비율이 12%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단시간 노동자와 일시휴업으로 일거리가 없는 노동자수는 2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36시간 이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자 파견의 전면 허용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22만명인 파견 노동자가 크게 늘어날 것과 임시직, 계약직 등의 형태도 확산 추세를 감안한다면 불안정취업자수는 전망하기조차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1,300만명의 일노동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실업 또는 불안정취업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인적자본 축적이나 숙련형성, 생산성향상이 과연 가능하거나 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고용구조와 고용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임금과 노동시간

97년의 경우 비농전산업의 임금총액 상승률은 2/4분기 이후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역시 2사분기와 3사분기에 각각 5.5, 2.7% 상승에 그쳐 2/4분기 생산성 증가율 15.1%(산출량 지수 9.7%)를 크게 밑돌았다. 임금상승률이 급속히 둔화된 것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고용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실시로 고임금 노동자들이 실직함에 따라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명예퇴직이 주로 실시된 금융업의 임금총액이 3/4분기에 전년동기비 4.6% 감소한 것이나 남성 중장년층의 퇴직 등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축소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약임금인상률은 97년 9월달 현재 총액임금 기준 4.4% 증가에 머물러 임금동결 혹은 임금교섭 위임 등의 영향을 보여 주었다. 임금구성별로는 초과근로시간이 4.9% 감소한 영향으로 초과급여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기업들의 상여금 축소로 특별급여의 상승률도 크게 둔화(3/4분기 5.3% 증가)되었다. 산업별로는

경기의 영향을 받아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의 상승률이 12.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제조업과 금융 보험 및 사업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한편 여성의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별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97년 들어 생산직의 임금상승률이 사무직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간은 96년 이후 감소 추세가 97년에도 이어졌는데, 건설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업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체의 노동시간 감소율이 더 높았다.

98년에는 경기부진과 기업도산의 위협 앞에서 협약임금인상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율인상으로 불가상승률이 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임금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평복임금상승률은 임금동결, 혹은 임금삭감을 통한 실업 방지 대책이 확산되고 있으며, 초과근로시간의 감소와 특별임금 미지급 등의 요인이 겹치기 때문에 불가상승률인 6% 이상의 상승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근로자 파견제의 실시로 정규직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병복임금증가율을 크게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경기부진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영향을 받아 96년 이후의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에서 노동시간 감소를 통한 일자리공유 방식이 채택된다면 노동시간 감소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감소된 노동시간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인데, 그 문제는 99년 이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대응과제

이상과 같은 98년의 암울한 노동경제 전망은 99년 이후에도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 경기회복이 2000년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경기가 회복되도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다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즉 고용은 경기에 대하여 후행성을 띠기 때문이다. 결국 실업자 100만명 시대는 아무리 짧아도 3년은 갈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시급하며, 특히 기존의 기업복지 중심의 시스템이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조기에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업복지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물론 과도기에 기업복지부터 줄여나가는 것은 너무나 부채질한 처사일 것이다.

대량실업시대, 혹은 소위 'IMF시대'를 지나는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의 처지는 한마디로 가시밭길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결국 실업자 100만명 시대는 아무리 짧아도 3년은 갈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시급하며, 특히 기존의 기업복지 중심의 시스템이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조기에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가능한 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에 대하여는 노동시간 단축과 배치전환, 임금인상 동결을 통한 일자리 공유를 요구하고 정부에 대하여는 직업소개기능과 재훈련 정책의 강화, 고용보험의 확대, 신규일자리 창출, 실질임금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근로소득세의 파격적인 인하 등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는 실시 연한이 짧기 때문에 본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 실업보조금이 지급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 재정 보조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물론 IMF의 요구에 따라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순위로 고용보험 확충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벌에 편중되었던 금융을 기술력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난 중소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시에는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간 재벌의 폭벌경영, 선단경영, 차입경영과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 정부관료 등에 대한 책임추궁을 우

선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고통에 상응하는 사용자들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재벌의 해체와 소유주 재산의 회사 정상화 기금으로의 출연, 투명한 경영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실질임금 감소와 불안정취업자 증가로 소득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실질임금의 감소가 소득계층간에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지표로 노·사·정이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사업소득 및 자산소득 등과 임금소득간의 형평성이 유지 개선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감시함으로써 진정한 고통분담을 강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조의 이러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세력관계는 당분간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도 파견근로 등 불안정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조직력의 하락이 크게 염려되고 있다. 노동계의 무지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